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청년 가구 아동수당 수급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2020 년 8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김 정 환

## 국문초록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는 현재 가구 별로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의 금액을 보조하는 청년 가구 대상 복지정책이다. 본 연구는 아동수당 제도 시행 이후 아동수당 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순이전소득 규모 및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이 변화하는 양상을 검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하위·중위 소득분위에 속한 청년 가구는 아동수당 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순이전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크기는 중위 소득분위보다 하위 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은 아동수당 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중위 소득분위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수당 제도는 하위 소득분위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노인 가구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청년 가구는 일부 소득분위에서만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아동수당,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지출

학 번 : 2018-23139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	1
제 2 절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와 연구 의의 .....	4
제 2 장 선행연구 .....	8
제 1 절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	8
제 2 절 구축효과 추정과 내생성 문제 .....	12
제 3 장 연구설계 .....	15
제 1 절 연구 문제 및 가설 .....	15
제 2 절 데이터 선정과 변수 설정 .....	18
제 3 절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21
제 4 장 연구 결과 .....	23
제 1 절 기초분석 결과 .....	23
제 2 절 이중차이분석 결과 .....	29
제 3 절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	32
제 4 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35
제 5 장 결론 .....	42
참고문헌 .....	45
Abstract .....	48

## 표 목 차

[표 1]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의 내용 .....	5
[표 2] 연구가설 요약 .....	16
[표 3] 사적이전소득 및 가구 간 이전지출 정의 .....	19
[표 4] 가계동향조사 기준 변수 설정 .....	20
[표 5] 제도 도입 전·후 가구 기초통계량(평균) .....	24
[표 6] 소득분위별 제도 도입 전·후 기초통계량(월평균) ...	25
[표 7] 소득분위별 이전소득 관련 기초통계량(월평균) .....	26
[표 8] 사적이전소득 유·무 집단의 특성 차이 .....	27
[표 9] 전체 가구 대상 이중차이분석 결과 .....	30
[표 10] 소득분위별 아동수당 수급액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	33
[표 11] 2018~2019년 영유아 양육 가구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지출 ..	37
[표 12] 2018~2019년 영유아 미양육 가구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지출 ·	38
[표 13] 2019년 1·2분기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액 변화 ·	40

## 그 립 목 차

[그림 1] 가계동향조사 공적이전소득 가구원 조사표 .....	19
[그림 2] 개념적 준거틀로 나타낸 연구 모형 .....	21
[그림 3] 이중차이분석 기반 회귀식 .....	22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 배경

청년 실업과 빈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청년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는 최근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재분배 정책의 주요 큰 틀은 복지 부담과 수혜의 주체가 세대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주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청년 계층이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납세로써 부담하고 고령 계층이 생애주기 소득 감소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양상으로 재분배가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은 실업률 증가, 단기-임시직 위주의 일자리 증가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 양육 부담에 따른 저출산 현상 심화와 같은 복합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청년 가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대상 복지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별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수당을 들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시 매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sup>1)</sup>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원)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대상 선정 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sup>2)</sup> 이들 사업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가구에 대한 현금 보조를 통해

1)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이란」, 2020. 3. 29. 방문.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2019. 3. 18.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돕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

재분배 정책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공적이전소득이 개인 간의 사적이전을 통한 재분배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정부의 공적이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지, 지인 간의 사적인 부의 이전(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적인 부의 이전이 동일 집단 내의 개인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타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일 경우, 정부의 공적이전 규모의 확대가 개인 간의 사적이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역시 병행되었다. 공적이전 규모의 확대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경우 본래 복지 정책이 목표로 했던 수혜계층의 소득이 수급액만큼 증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복지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의의가 있다.

국내와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공적이전규모 확대가 그들이 자녀 세대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인 가구가 아닌 청년 가구에 대해서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 본 연구는 청년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뿐만 아니라, 청년 가구에게 발생하는 공적이전소득은 노인 가구와 달리 선별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대개의 청년 가구 대상 복지정책은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장애수당과 같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 감소가 발생한 가구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노인 가구

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 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처럼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소득 이전이 공적이전소득<sup>3)</su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내 만 6~7세 미만 아동 수에 정액 급여를 곱한 값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는 청년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구별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한 2018년 9월부터 대다수 가구(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단절적 시계열의 특성을 보이기에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기에도 유용한 정책 변수가 된다.

따라서 아동수당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일반적인 청년 대상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끔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는 한 개의 변수로 취급되었던 공적이전소득을, 아동수당으로 인한 급여(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아동 수로 추정된 값)와 나머지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고, 아동수당의 시행 전후로 개별 가구의 사적이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검토한다. 추가로 균등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영향이 소득 계층별로 달라지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

3)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 받은 공적인 사회보장 수혜금을 의미함.



## 제 2 절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와 연구 의의

한국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아동 양육의 책임을 가계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1명당 매월 10만원 씩 보조하는 형태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때의 소득·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예시적으로 부부 2인, 아동 2명으로 이루어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인정액이 1,436만원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표 1> 참조).

이후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 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그 대상이 재차 확대되었다. 즉, 2018년 4분기를 제외하면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 가구에 대해 아동 1명당 10만 원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이상의 설명에 따른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이후부터, 2019년 말까지의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의 내용

시기	주요 개정 내용	지급 방식					
2018년 9월	최초 아동수당 제도 시행,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을 만족하는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 수에 따라 지급	구분	아동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
		금액 (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1인 증가시 마다 266만 원씩 가산
2019년 1월	소득·재산 기준 삭제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 1명마다 월 10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2019년 9월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대상 아동 확대	가구 내 만 7세 미만 아동 1명마다 월 10만원 씩 지급					

자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및 정부24 아동수당 관련 공지

이처럼 ‘보편적 복지’ 및 ‘전면적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수당 제도는 청년가구 공적이전소득의 순증가가 사전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에 유용한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공적이전소득의 사전이전소득 구축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노인 가구에 초점을 맞출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상당 부분이 필요 기반(need-based)이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상당 부분이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같이 비선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과 사전이전소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의 개입 가능성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청년 가구의 경우, 통상의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은 미취업 가구이거나, 양육비 등 필수적 생활비 증가에 비해 근로소득이 적어 부모 세대나 주변으로부터 소득을 지원받는 등의 예외적, 선별적 상황일 때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가구의 경제적 빈곤이라는 제3의 변수와 연관되어 사적이전소득 역시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

노인 가구에서 주로 관측되는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가 청년 가구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가 유용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먼저, 청년 가구에 대한 국가 복지 프로그램 중, 청년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상태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요건(아동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복지 제도로 아동수당이 사실상 최초이며 유일하다. 아동수당의 도입은 제3의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청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통상 복지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대상 및 급여 확대와 같은 시계열적 변동을 거치기 마련임에 반해, 아동수당 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 의지에 힘입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단절적인 시계열을 보여준다. 그 이후에는 소득 기준(하위 90%) 폐지 및 대상 아동 확대(만 6세 미만→만 7세 미만) 정도의 변화만 보여주고 있어, 아동수당은 변수의 외생적, 일회적 증가라는 실험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도적 사례가 된다.

종합하면,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청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관련하여 노인가구에 집중되었던 기존 연구의

범위를 전 연령계층으로 확대하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청년 가구 전체 혹은 일부 집단에서 아동수당의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양상이 확인될 경우,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청년 가구의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는 본래의 정책 의도보다 감쇄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할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사적이전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될 경우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본래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청년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최초의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새로운 청년 가구 대상 공적이전 제도가 불러올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청년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3의 변수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로 산출해냄으로써, 청년 가구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인 복지 확대가 실질적으로 청년층에 얼마만큼 귀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제 2 장 선행연구

### 제 1 절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우선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경로는 사적이전소득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Cox(1987)에 따르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가구원의 효용을 증대시키려는 이타주의적 동기와 다른 가구원에게 서비스 및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교환적 동기로 나뉘는데, 이론적으로는 전자의 경우에만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구원 간의 소득이전에 의한 것이라면 특정 가구원의 소득이 정부의 재분배에 의해 외생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궁극적인 재정 부담을 지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동일한 크기의 사적이전을 실시할 유인이 생긴다. 반면, 교환적 동기가 작용하여 사적이전소득이 자녀 가구에 대한 노동 제공(돌봄 노동, 가사 노동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띠는다면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의 중립성은 이론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기존 연구들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축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김중예·김현섭(201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령연금 확대가 노인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적 노령연금의

1랜드 증가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여 사는 자녀들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을 0.25~0.30랜드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ensen(2004)). 또한, 2002년에 노령연금을 도입한 대만의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집단이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을 받을 확률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rardi et al.(2014)).

국내 사례에 대한 연구는 해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특히 중·고령층에 대한 분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의 존재를 일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경배(2018)는 노인가구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갖는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패널조사 7~9차 자료에 기초한 패널토빗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사적이전소득은 3,3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의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도구변수로 출생 코호트를 활용한 Jung et al.(2016)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을 받을 확률이 40%p 가량 하락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인가구의 경우 그 감소분이 76.2%p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인·비노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한 성재민(2006)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조사 6~7차년도 패널의 ‘친척친지보조금’ 항목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적이전 규모를 공적소득이전액에 회귀한 결과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회귀계수가 (-)으로 추정되었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노인 가구에 대해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연구는 비교적 미비한 편이나, 대체적으로 노인가구에 비해 비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성호(2011)은 1982~200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발생에 대한 로짓모형을 분석한 후 공적이전소득의 회귀계수를 바

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의 추가 증가분의 14.9%가, 비노인가구의 경우 15.7%가 이전소득 증대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또, 2006~2010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미시 자료 분석을 수행한 전승훈·박승준(2012)에 따르면, 1인 노인가구의 경우 2008,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서 사적이전소득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의 유의미한 값을 가진 반면, 1인 비노인가구의 경우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해에서 탄력성이 오히려 (+)의 유의미한 값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2인 이상 비노인가구에 대한 분석 결과 사적이전소득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2003년 이후 모두 (+)의 유의미한 값을 보이거나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승훈·박승준(2012)은 이에 대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적이전소득의 동기가 이타적 동기에서 교환적 동기로 변화하면서 구축효과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부호가 (-)에서 (+)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수당으로 인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청·중년층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및 가구간 이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가계 소득 대상 패널자료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그 외 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는 모두 아동수당 도입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9년 가계의 경제활동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sup>4)</sup>

최근의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도의 도입 전 가상의 아동 보육료 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도입 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4)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현재(2020.6.) 2019년 자료까지 공개되고 있으며, 2019년 자료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계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 각각의 최신 자료는 모두 2018년 한 해 동안의 경제활동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가구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지영(2020)은 2018~2019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25~45세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만 6세 미만 아동)를 처치 집단으로, 대상이 아닌 만 6세~12세 미만 아동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 뒤, 아동수당의 도입 전후(2018년 3분기 기준) 더미 변수가 각 집단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 도입 이후 아동수당을 수급한 처치집단은 분기별로 가구소득이 3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구축효과 추정과 내생성

정부의 소득 이전 제도는 통상 대상자의 경제적 요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급여 여부나 급여액의 규모가 조정되는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변화를 조망하는 연구는 필연적으로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Moffitt(2016)은 미국의 행정부의 국민 의료보험 Medicaid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 공공의료보험의 도입이 민간 의료보험을 구축하는 경로에 대한 이해는 직관적임에 비해 실제 구축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격 여부(eligibility)의 내생성이 연구자들에게 난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별 가구의 생산성 임금, 정부 공공정책에 대한 개인의 신뢰나 태도 등 공공복지 및 소득보전 정책의 자격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측되지 않는 요인들이 개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개별 가구의 관측되지 않는 요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내생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내생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Juarez(2009)는 2003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멕시코시티(Mexico City)의 공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관측되지 않는 제 3의 요인이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모두 (+)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경우 소득을 외생변수로 취급하는 분석 기법이 구축효과를 과소추정하게 되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uarez(2009)는 가구의 개별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면서 사적이전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변수로 70세 이상 변수, 멕시코시티 거주자 변수, 정부의 공공 복지프로그램이 시행된 2002년 이후 시기인 가구 변수 간의 교호작용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내생성의 문제로부터 자유

로운 개인의 외생적 소득 증가분을 추정하여 공공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노령연금 수급액의 86%의 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에서 평균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Gerardi et al.(2014)는 대만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도입이 개별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수급 확률 및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Juarez(2009)와 마찬가지로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정부의 지원금액 총액을 회귀모형에 반영하여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게 되면, 자녀 가구로부터 소득 이전을 기대하는 가구가 정부의 공공부조 수급을 신청하지 않아 허위적인 구축효과가 나타나거나 관측되지 않는 요인이 정부의 공공부조와 개별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2002년부터 시행된 Senior Citizens Welfare Living Allowance(노인 복지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금액에 대한 도구변수로 설정하여,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효과 구축 여부를 검증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그 크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최적의 정부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적이전소득의 일부분이 사적이전소득의 감소로 연결된다면, 복지 대상에 대한 정책 지원의 효과가 본래 의도했던 크기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크기가 상당할 경우 실질적 귀착이 다른 정책 집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역효과를 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는 정부만이 유일한 부의 재분배의 주체라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의 이론 연구는 사적이전소득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 재분배가 최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경우 추가적인 정부의 과세 및 소득 재분배가 개별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여 최적의 분배에서 벗어나는 비효율성을 오히려 낳을 수 있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Chetty, R & Saez, E(2010), Golsov et al.(2007)).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노인 가구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노인 가구의 경우 통상 정부의 공공부조가 대상자가 노인인지 여부와 같이 비선별적인 요건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공적이전소득의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청년 가구에 대해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에 따른 개별 가구의 외생적 소득 증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 제 3 장 연구 설계

### 제 1 절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청년 가구의 아동수당 수급이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및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때, 기존 연구가 사적이전소득만을 종속 변수로 분석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는 사적이전 지출에도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노인 가구에 비해 다수이고, 부모나 다른 가구에 대해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빈도가 노인 가구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사적이전소득과 지출 모두 개인 간의 소득이전을 통한 재분배의 수단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이론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적 이전과 지출 모두를 종속변수화 하여 분석해도 무방하다.

연구 문제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가설 1~3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설 1과 2는 본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 가설 3은 가설 1의 설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의 소득분위에 대한 가설이다.

<표 2> 연구 가설 요약

	연구 가설	
	가설 1	가설 2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	청년 가구의 아동수당 수급은 사적이전 소득을 받을 확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청년 가구의 아동수당 수급은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한 사적순이전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조절변수로서의 소득계층에 대한 검증	가설 3	소득 상위 계층에 해당할수록 가설 1, 가설 2는 약화될 것이다.

가설 1과 2에서 본 연구는 우선 노인 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수급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사적이전소득을 받을 확률 및 그 크기 모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 세대가 이타주의적 동기를 가지고 청년 가구의 효용 증대를 위해 생계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청년 가구로 소득을 이전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청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청년 가구는 부모 세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을 줄여 자신과 부모 세대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 가구의 사적이전지출이 청년 가구와 부모 세대 간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제공하는 자녀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교환적 동기에 의한 것일 경우 아동수당 수급이 사적이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교환적 동기에 의한 것일 경우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노인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증가시켜 동일한 돌봄 노동에 대해 더 많은 사적이전소득을 지급 받게 될 수 있음을 살펴본 것처럼, 아동수당을 수급한 청년 가구는 부모 세대가 제공하던 돌봄 노동을 시장의 아동양육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 가구의 부모 세대에 대한 사적이전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설 3은 가설 1과 2에 대한 이론적 검증이 소득분위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상하였다. 소득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생계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증여, 상속, 부모-자식 간의 孝 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받는 영향이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 제 2 절 데이터 선정과 변수 설정

본 연구는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인한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개별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및 지출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자료를 이용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동향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 및 분배 불평등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sup>5)</sup>, 소득부문 자료는 조사대상에 선정된 표본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은 소득 및 분배 지표의 시계열 차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 가구 전체 중 일부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연동 표본 방식이 적용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속한 개인(가구주,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상태 및 소득, 지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공적이전소득을 비롯한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유형 소득에 대해 가구별로 주기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가계동향조사 조사표에서 개별 가구원들의 공적이전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묻는 항목을 발췌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 3번 항목인 사회수혜금으로 포함되며, 조사표 맨 뒷장에 첨부된 참고자료에서는 사회수혜금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정부의 현금 수혜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

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용자통계정보보고서」, 2019. 12.

<그림 1> 가계동향조사 공적이전소득 가구원 조사표

가구원번호	1	2	3	4	5
성명					
<b>4 공적이전소득(정부수혜금):</b>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받은 공적인 사회보장 수혜금					
①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② 기초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③ 사회수혜금 (생계·실업급여, 양육수당 등)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④ 연말정산 환급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 가계동향조사 조사표에서 발췌

한편, 조사표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는 사적이전소득을 “다른 가구(부모, 자녀 등)나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생활비, 보조금 등)”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현물이전 항목에서 조사하고 있다.<sup>6)</sup> 사적이전지출은 조사표상 기타 비소비지출 항목 아래의 ‘가구 간 이전지출’ 항목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다른 가구(부모·자녀·친지 등)에 지출하는 금액(설용돈, 생활비, 보조금 등, 해외송금액 포함)”으로 참고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3> 사적이전소득 및 가구 간 이전지출 정의

구분	정의
사적이전소득	다른 가구(부모, 자녀 등)나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생활비, 보조금 등)
가구 간 이전지출	다른 가구(부모, 자녀, 친지 등)에 지출하는 금액(설용돈, 생활비, 보조금 등, 해외송금액 포함)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 가계동향조사 조사표 및 설계서에서 발췌

6) 경조소득 및 기타 비경상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다른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조소득을 사적이전소득과 별도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의 활용은 경조사 발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임의적·극단적 증가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연구가설 검증에 필요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조절변수(소득분위)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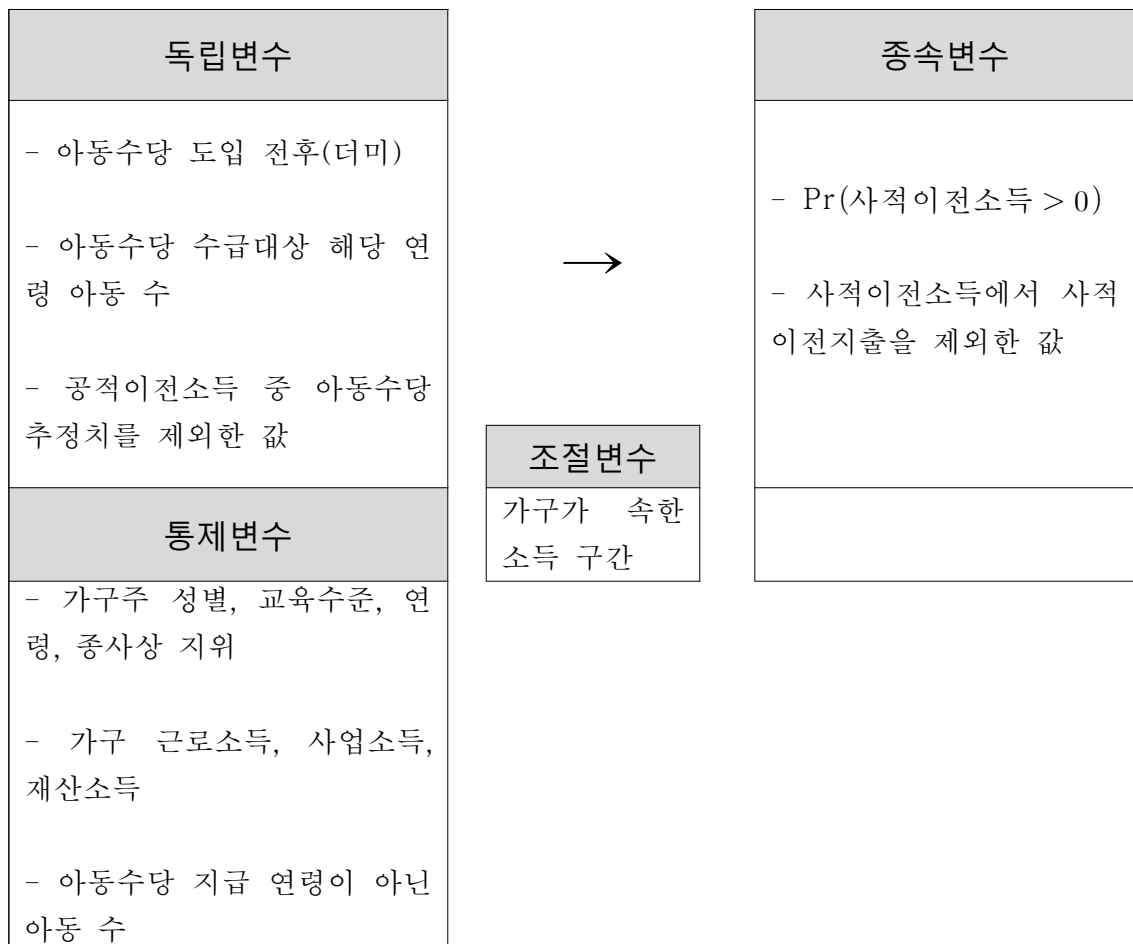
<표 4> 가계동향조사 기준 변수 설정

구분	내용	비고
독립변수	아동수당 도입 더미변수	2018년 3분기 후=1, 전=0
	아동수당 지급 요건 해당 아동 수	18년 9월~19년 9월 : 만 6세 미만 아동 수
	공적이전소득 중 아동수당 수급액(추정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종속변수	사전이전소득 발생확률	매기 사적이전소득이 0보다 클 확률
	사전이전소득에서 사전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	-
조절변수	균등화 중위소득 기준 소득 구간	매기 균등화 중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70% 이하 소득분위, 70~150% 소득분위, 150% 이상 소득분위

### 제 3 절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불완전패널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분석 기법으로는 아동수당 도입 전후 시점에 관한 더미와 개별 가구 내 아동수당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아동 수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differences-in-differences method)을 실시한다.

<그림 2> 개념적 준거틀로 나타낸 연구 모형



위의 연구모형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이중차이분석 기법을 적용한 회귀분석 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Private_{it}$ 와  $f$ 는 각각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별로 적합한 형태를 지닌 종속변수와 회귀식이다. 가설 1의 검증에서는  $Private_{it}$ 는 사적이전소득이 0보다 클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지니는 더미 변수이고  $f$ 는 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난다. 가설 2의 검증에서는  $Private_{it}$ 가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액을 뺀 사적순이전소득액을 표시하게끔 정의되고,  $f$ 는 이에 대한 선형회귀방정식이 된다.

한편 조절변수에 대한 분석은 전체 분석 대상 가구를 균등화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하위 소득분위, 70~150% 중위 소득분위, 150% 이상 상위 소득분위로 나누고, 각 소득분위에 속할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를 <그림 3>의 이중차이분석에서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교차항( $fnb*year_t$ )에 또다시 교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반영함으로써 진행한다.

### <그림 3> 이중차이분석 기반 회귀식

---

$$Private_{it} =$$

$$f(\alpha + \beta_1 Z + \beta_2 * fnb + \beta_3 * year_t + \beta_4 * fnb * year_t + \beta_5 * \text{공적이전소득} + \epsilon)$$

$Z$  : 성별, 가구주연령, 교육 수준 등 통제변수

$fnb_{it}$  : 아동수당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아동 수

$year_t$  : 아동수당 도입 더미변수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조사금액에서 아동수당 수령액(추정)을 제외한 값

---

## 제 4 장 연구 결과

### 제 1 절 기초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분석 단위별 각 변수의 충분한 변동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시점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면서도, 제도 도입 전후에 따른 가구별 행태 변화를 집중적으로 포착하는 기간을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현재(2020.6. 기준)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 상에서는 2019년도 4분기까지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미시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계동향조사 2018년 1분기, 2분기, 4분기, 2019년 1분기, 2분기, 총 5개 분기를 분석 대상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2018년 3분기를 제외한 것은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기 전, 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또 2017년도 자료를 분석 대상 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비교적 짧은 시계열 동안의 가구별 행태를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본의 내재적 변동 등의 혼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제도는 2019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2019년 9월이 속한 3분기와 그 이후 시점인 4분기를 다른 2019년 분기들과 같은 ‘제도 도입 후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9년 3, 4분기 데이터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가구는 부모-자녀로만 구성된 유자녀 가구(미성년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로 하되, 성인 자녀(만 18세

이상 자녀) 및 부모, 자녀 이외의 세대 구성원(조부모 세대, 친척, 기타 등) 등이 포함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모 외의 조부모 세대 구성원 혹은 친지 등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로가 그렇지 않은 가구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 세대의 양육 책임의 정도와 사적이전에 대한 소요는 가구별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성인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자료 중 2018년 1분기, 2분기로 이루어진 제도 도입 전 가구와 2018년 4분기, 2019년 1~2분기로 이루어진 제도 도입 후 가구는 총 6,410가구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제도 도입 전 가구는 2,624가구이고, 도입 후 가구는 3,786가구다. 제도 도입 전과 후의 전체 분석 대상 가구의 주요 경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 제도 도입 전·후 가구 기초통계량(월평균)

구분	제도 도입 전	제도 도입 후
소득	5,037,461원	5,074,212원
공적이전소득(아동수당 제외)	132,042원	128,813원
아동수당	-	53,566원
사적이전소득	284,032원	264,449원
사적이전지출	285,306원	278,539원
사적이전소득이 0보다 큰 가구 비중	55.8%	42.0%
가구 수	2,624가구	3,786가구
총 가구 수	6,410가구	

<표 5>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 도입 후 개별 가구는 평균 53,566원을 매달 아동수당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도입 후 아동수당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은 평균 3,229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적이전소득은 19,583원 감소하였고, 사적이전지출 감소액은 6,767원으로 사적이전소득 감소액의 3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분석 대상 가구 중 사적이전소득이 0보다 큰 가구의 비중은 아동수당 도입 전 55.8%에서 42.0%로 13.8%p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평균통계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적순이전소득액(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과 사적이전소득액이 0보다 클 확률 모두 아동수당 제도 도입 전보다 후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동수당 도입 전과 후 각각에 대하여 균등화 가구소득 중위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별 주요 경제적 변수의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소득과 가구 소득을 구성하는 주요 소득원별 소득액(균등화 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표 6> 소득분위별 제도 도입 전·후 기초통계량(월평균)

(단위 : 원)

구분		소득분위 구분		
		중위소득 70% 이하 N=1,508	중위소득 70~150% N=3,586	중위소득 150% 이상 N=1,316
총소득	도입 전	1,201,989	2,420,793	5,152,703
	도입 후	1,184,376	2,531,184	4,955,997
근로소득	도입 전	689,321	1,728,042	4,078,656
	도입 후	634,760	1,879,871	3,720,082
사업소득	도입 전	325,662	497,316	735,051
	도입 후	343,015	444,186	909,767
재산소득	도입 전	3,276	2,996	13,341
	도입 후	1,418	3,159	4,441
이전소득	도입 전	175,969	179,217	291,121
	도입 후	203,240	198,848	290,300

주) 소득액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음.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위소득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은 총 소득액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중위소득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중위소득의 150% 이상 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동수당 도입 전 408만 원에서 후에는 372만 원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포괄하는 소득원으로, 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하위, 중위 소득계층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소득은 연금소득,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연말정산환급금, 사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이전소득의 대부분은 사회수혜금과 연말정산환급금, 사적이전소득이 구성하고 있다. 주요 구성원을 중심으로 소득분위별 이전소득 관련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소득분위별 이전소득 관련 기초통계량(월평균)

(단위 : 원, %)

구분		소득분위 구분		
		중위소득 70% 이하 N=1,508	중위소득 70~150% N=3,586	중위소득 150% 이상 N=1,316
이전소득	도입 전	175,969	179,217	291,121
	도입 후	203,240	198,848	290,300
사회수혜금	도입 전	46,275(26.3)	26,438(14.8)	20,765(7.1)
	도입 후	91,009(44.8)	60,921(30.6)	43,049(14.8)
사적이전소득	도입 전	108,977(61.9)	123,316(68.8)	192,779(66.2)
	도입 후	96,004(47.2)	113,114(56.9)	197,818(68.1)
연말정산환급금	도입 전	2,611(1.5)	21,934(12.2)	73,986(25.4)
	도입 후	2,717(1.3)	19,510(9.8)	48,572(16.7)

주: 1) 소득액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연금소득은 청년 가구의 특성상 표시하지 않았음.

2) 괄호 안의 수치는 각 항목이 전체 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아동수당 도입 전보다 후의 가구의 사회수혜금(아동수당 수급액을 포함하는 이전소득 항목임)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 전, 후 대비 사적이전소득이 전체 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중위 소득분위에서 각각 14.7%p, 11.9%p씩 감소하였음에 반해, 상위 소득분위에서는 1.9%p 증가하였다.

사적이전소득 발생 유무별로 각 집단의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균등화 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더 적으며, 가구주의 상용직 근로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한편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각각 42.3세, 41.2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가 부모 세대 등으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수취하는지 유무는 생애주기보다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소득액, 고용의 질, 가구주의 성별)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표 8> 사적이전소득 유·무 집단의 특성 차이

구분	사적이전소득 있는 가구 (N=3,055가구)	사적이전소득 없는 가구 (N=3,355가구)
근로소득(원)	1,875,162	2,128,016
가구주 상용직 근로비율(%)	60.7%	68.1%
여성 가구주 비율(%)	14.7%	5.7%
가구주 연령	41.2세	42.3세

주) 소득액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음.



이상의 기초 분석 결과는 전체 분석 대상 가구(유자녀 가구로 아동수당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가 모두 포함됨)에 대한 자료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함께 포괄된 기초통계량에 관한 자료이다. 전체 분석 대상 가구의 기초통계량상으로는 아동수당 도입 전 대비 후의 사적이전소득이 하위 소득분위와 중위 소득분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시점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 다른 경제적 여건 변화(근로소득, 사업소득 변화 등)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수당 수급액이 청년 가구의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절의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 2 절 이중차이분석 결과

사적순이전소득액과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이중차이분석을 전체 분석 대상 6,4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9>의 첫 번째 열은 사적순이전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 실시 결과이고, 두 번째 열은 사적이전소득이 0보다 클 경우 1의 값을 지니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실시 결과이다. 아동수당 수급액에 대한 정책변수는 6세 미만 아동 수와 제도 도입 이후 시점 더미 간의 교차항으로 반영된다. 이 변수의 계수가 (+)의 유의미한 값을 지닌다면 아동수당 수급 증가에 따라 사적순이전소득액 및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의 유의미한 값을 지닌다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에서 아동수당 정책변수 관련 교차항의 회귀계수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유의미한 (+)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수당 수급액의 증가는 사적순이전소득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2에서 교차항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수당 수급이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제도 도입 이후 시점 더미의 계수는 모형 1( $p < 0.1$ )과 모형 2( $p < 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의 값을 보였다.

<표 9> 전체 가구 대상 이중차이분석 결과

	모형 1 : 사적순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가구간이전지출)		모형 2 : Pr(사적이전소득>0)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공적이전소득(아동수당 제외)	-1.971e-01 (2.861e-02)	0.000***	9.159e-08 (8.437e-08)	0.278
6세 미만 아동 수	6.549e+04 (2.381e+04)	0.001***	2.361e-01 (6.973e-02)	0.001***
제도 도입 이후=1	-4.390e+04 (2.267e+04)	0.053*	-5.902e-01 (6.655e-02)	0.000***
6세 미만 아동 수*제도 도입 이후	4.576e+04 (2.516e+04)	0.069*	5.562e-03 (7.333e-02)	0.940
가구주 연령	-3.352e+03 (1.782e+03)	0.060*	-2.319e-02 (5.248e-03)	0.000***
6세~18세 미만 자녀 수	6.972e+04 (1.366e+04)	0.000***	1.466e-01 (4.000e-02)	0.000***
근로소득	-5.807e-02 (3.833e-03)	0.000***	-2.120e-08 (1.131e-08)	0.061**
사업소득	-9.463e-02 (5.775e-03)	0.000***	-6.628e-08 (1.796e-08)	0.000***
주택임대소득	2.375e-02 (2.624e-02)	0.365	1.074e-07 (7.683e-08)	0.162
재산소득	-1.847e-01 (1.084e-01)	0.088*	9.041e-08 (3.124e-07)	0.772
가구주 종사상 지위(상용직=1)	-9.081e+04 (2.617e+04)	0.001***	-4.173e-01 (7.746e-02)	0.000***
가구주 성별(여성=1)	1.276e+06 (2.937e+04)	0.000***	1.084e+00 (9.104e-02)	0.000***
학력(대학교 이상=1)	9.731e+04 (1.870e+04)	0.000***	5.190e-02 (5.457e-02)	0.342
관측치 수	6,410가구			

주) \* 표시는 개수에 따라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함.

\*\*\* 0.01/ \*\* 0.05 / \* 0.10

즉, 아동수당 수급은 청년 가구의 사적순이전소득을 감소시키기 보다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고,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할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 때문에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감쇄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논지와는 달리,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형 1에서 아동수당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순이전소득액을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소득보전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사적순이전소득액과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에 해당할수록 사적순이전소득액 및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여력이 확보된 가구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가계의 상대적인 의존도가 낮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적순이전소득액에 대한 아동수당 수급액 관련 교차항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득분위별 분석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절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소득분위별 이중차이분석 방법은 제1절의 분석 방식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각 가구가 속하는 소득분위를 분류하기 위한 다음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먼저,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분기별로 균등화 가구소득(가구 총소득을 각 가구에 속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의 중위값을 산출한 뒤, 중위 가구소득의 70%, 150%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어 개별 가구가 속하는 소득분위를 파악한다. 즉, 균등화 가구소득 중위값의 70% 이하 가구(하위 소득분위), 70~150% 사이 구간 가구(중위 소득분위), 150% 이상 가구(상위 소득분위)로 매 분기 개별 가구를 분류한다. 조사 분기별로 위의 기준에 따라 각 가구를 분류한 결과, 전체 분석 대상 가구 6,410가구 중 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는 1,508가구, 중위 소득분위 가구는 3,586가구, 상위 소득분위 가구는 1,316가구로 나타났다.

그 후, 제 2 절과 동일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여 각 소득분위별로 아동수당 수급액이 사적순이전소득액 및 사적이전소득 발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때 아동수당 수급과 관련된 정책 변수는 제 2 절의 분석에 사용되었던 ‘6세 미만 아동 수×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더미’ 교차항과 각 가구가 속한 소득분위 관련 더미변수들 사이의 교차항으로 구성하여 모형에 추가 반영하였다.<sup>7)</sup>

---

7) 더미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에 대한 더미 변수는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표 10> 소득분위별 아동수당 수급액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모형 3 : 사적순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가구간이전지출)		모형 4 : Pr(사적이전소득>0)	
	추정계수	유의확률	추정계수	유의확률
공적이전소득(아동수당 제외)	-2.457e-01 (2.720e-02)	0.000***	5.494e-08 (8.558e-08)	0.521
6세 미만 아동 수	1.449e+05 (2.272e+04)	0.000***	2.924e-01 (7.074e-02)	0.000***
제도 도입 이후=1	-2.642e+04 (2.144e+04)	0.218	-5.804e-01 (6.683e-02)	0.000***
중위 소득분위 소속 여부=1	5.642e+05 (2.622e+04)	0.000***	4.981e-01 (8.518e-02)	0.000***
상위 소득분위 소속 여부=1	1.127e+06 (4.168e+04)	0.000***	8.125e-01 (1.407e-01)	0.000***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 (6세 미만 아동 수×제도 도입 이후)	1.111e+05 (3.240e+04)	0.001***	1.145e-01 (9.988e-02)	0.252
-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 × 중위구간 소속여부=1	-9.013e+04 (3.187e+04)	0.005***	-1.706e-01 (9.769e-02)	0.081*
-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 × 상위구간 소속여부=1	-1.858e+05 (4.475e+04)	0.000***	-1.286e-01 (1.376e-01)	0.350
통제변수	- 생략 -			
관측치 수	6,410가구			

주) \* 표시는 개수에 따라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함.

\*\*\* 0.01/ \*\* 0.05 / \* 0.10

모형 3과 4는 각각 사적순이전소득액,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에 대한 소득분위별 이중차이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을 살펴보면, 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순이전소득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6세 미만 아동수와 제도 도입 이후 더미 간의 교차항의 회귀계수). 중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와 중위 소득분위 소속 더미 간

의 교호 작용의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미하며 (-)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사적순이전소득액이 증가하는 크기는 하위 소득분위에 비해 작게 나타나나 여전히 (+)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사적순이전소득액이 20,970원 증가). 마지막으로 상위 소득분위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와 상위구간 소속 더미 간의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미하며 그 방향은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 아동 1명 증가할 때마다 사적순이전소득액은 74,700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 대한 분석에서는 하위, 상위 소득분위 모두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가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 증가가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영향이 다소 높은 유의확률(8.1%)을 보이며 확인되었다.

## 제 4 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아동수당 제도는 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발생을 구축하거나 사적순이전소득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가구들에 대한 복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중·상위 소득분위에서 각각 사적이전소득 발생이나 사적순이전소득액을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소득보전 효과라는 정책 목표만을 고려한다면 이들 소득분위는 하위 소득분위에 비해 후순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의 증가가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사적순이전소득액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현상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사적이전소득의 발생 요인을 이타주의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로 나누는 전통적 이론을 따른다면, 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우리나라 청년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세대의 사적이전은 이타주의적 동기보다는 교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타주의적 동기에 따른다면 아동수당 지급으로 효용이 증가한 청년 가구가 부모 세대의 효용 증대를 위해 사적순이전소득을 줄일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환적 동기가 청년-부모 세대 간 사적이전소득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론 및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이들은 김지경·송현주(2008)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동기, 부모 세대가 제공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 또는 부모 자신이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자녀로부터 먼 미래에 부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현재의 자녀를 보조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교환적 동기에 입각한 해석에 따른다면, 아동수당의 지급이 청년 가구의 생산성 및 미래 소득향상으로 이어져, 이를 기대한 청년 가구



의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자녀 및 조손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것이 청년 가구의 사적순이전소득 증가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 가구의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상속을 기대하며 현재의 부모 세대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보다는, 아동수당 수급으로 인해 증가한 공적이전소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투자하여 미래의 부양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러한 교환주의 이론에 입각한 해석은 이타주의 이론과는 달리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사적순이전소득을 구축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 양육의 현실이나 부모-자녀 세대 간의 경제적 공동체 의식, 또한 사적이전소득 양상을 결정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누락하고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교환적 동기 이외에도 우리나라 가구가 처한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① 높은 수준의 교육열 등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② 저소득층의 교육비 이외의 소비지출이 고정지출의 성격을 띠고, ③ 저소득층 가구 근로소득의 구조적 성장 부진과 차입 제약의 문제가 여기에 더해진다면, 추가적인 교육비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적순이전소득액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2018년(아동수당 도입 '18. 9.)과 2019년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18~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에 따르면 각 소득분위별(5분위, 가구소득 기준) 가계 소비지출액의 증가보다 교육비 관련 지출액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2018~2019년 영유아 양육 가구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지출

(단위 : 원, %)

구분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비지출	2018년	2,018,492	2,344,820	2,879,800	3,293,643	3,770,834
	2019년	1,940,632	2,254,169	2,773,173	3,276,411	4,119,499
	증가율	-3.86	-3.87	-3.70	-0.52	9.25
교육비	2018년	75,984	86,540	87,951	118,934	160,244
	2019년	262,209	171,021	185,472	251,706	335,775
	증가율	245.08	97.62	110.88	111.64	109.54
학원비 (학생)	2018년	73,250	52,648	51,199	75,752	83,717
	2019년	151,610	118,288	147,182	185,093	228,003
	증가율	106.98	124.68	187.47	144.34	172.35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sup>8)</sup>

한 명 이상의 영유아(만 6세 미만 아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비지출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표 11>),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비지출이 5% 미만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처럼 소비지출의 총액의 증가율이 제약된 상황에서 소득분위별 교육비 및 학생 학원비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의 교육비 총액 및 학생 학원비가 각각 245.1%, 107.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2분위에서도 각각 97.6%, 124.7% 수준의 증가율로 나타났다.

8) 2018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미시자료 11,308가구와 2019년 9,510가구 중 3개 세대 이상이 포함된 가구를 제외하고, 6세 미만 아동을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2018년 706가구, 2019년 757가구)를 추출하였다.

<표 12> 2018~2019년 영유아 미양육 가구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지출

(단위 : 원, %)

구분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비지출	2018년	1,944,645	2,490,896	2,960,304	3,599,935	4,875,777
	2019년	1,603,424	2,349,646	2,869,807	3,514,681	4,811,887
	증가율	-17.55	-5.67	-3.06	-2.37	-1.31
교육비	2018년	273,021	301,477	423,382	558,197	840,140
	2019년	231,403	363,818	533,656	672,310	1,074,409
	증가율	-15.24	20.68	26.05	20.44	27.88
학원비 (학생)	2018년	228,590	218,196	327,488	458,671	688,736
	2019년	151,608	293,745	424,090	561,522	876,379
	증가율	-33.68	34.62	29.5	22.42	27.2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sup>9)</sup>

반면, 영유아(만 6세 미만 아동) 미양육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2>), 1분위의 교육비 및 학생 학원비 지출액은 15.2%, 33.7%의 감소율로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영유아 양육 가구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서 교육비 및 학생 학원비 지출액이 1년간 2배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 반해, 영유아 미양육 가구의 경우 교육비 및 학생 학원비 지출액 증가율의 최대치는 각각 27.9%(교육비-5분위),

9) 2018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미시자료 11,308가구와 2019년 9,510가구 중 3개 세대 이상이 포함된 가구를 제외하고,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가구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2018년 1,686가구, 2019년 1,181가구)를 추출하였다.

34.6%(학생 학원비-2분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18~2019년간 총 소비지출액이 감소하는 가계의 제약 속에서도,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에 해당하였던 영유아 양육 가구는 미양육 가구에 비해 양육비 및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위 1분위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수당을 수급한 저소득층 가구가 이전소득의 증가를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데에 활용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계층을 불문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교육비 지출 증가율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가구 소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아동수당 수급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아동수당 수급으로 청년 가구의 이전소득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청년 가구가 부모 세대로부터 지급받는 사적순이전소득액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아동의 양육비 지출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사적순이전소득액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더해 아동 양육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가 사적순이전소득액의 증가로 이어지는 기제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가 직면한 차입 제약과 근로소득의 구조적 부진 현상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차입 제약은 불완전한 금융시장의 결과로서,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신용으로 조달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낮은 가구가 대출 기관의 신용 심사에서 대출이 허가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경원·변혜원(2012)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설문 항목 중 ‘과거 2~3년 안에 돈을 빌리려다 실패하거나 원하는 만큼 빌리지 못했다’고 응답한 가구를 차입 제약에 직면한 가구로 분류하고, 제약에 직면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분위 1분위는 14.4%, 2분위는 13.7%의 가구가 차입 제약에 직면한 것으로 나

타나 다른 소득분위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부채의 63%가 고소득(4, 5분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1분위의 경우 8%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저소득층 가구는 교육비 지출을 소득이 아닌 차입으로 조달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전소득과 더불어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근로소득의 경우 2019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위 소득 기준 70% 이하, 70~150%, 150% 이상 소득분위별 유자녀 가구들에 대해 2019년 1분기와 2분기 각각의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의 변화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3> 2019년 1·2분기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액 변화

구분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근로소득	하위	1,226,162원(-6.7%)	1,151,685원(-9.2%)
	중위	3,740,049원(+12.5%)	3,544,139원(+7.9%)
	상위	7,337,917원(-12.0%)	6,633,755원(-3.6%)
이전소득 (공적+사적)	하위	432,663원(+31.6%)	349,342(+21.2%)
	중위	479,838원(+20.4%)	333,273(+27.5%)
	상위	774,656(+14.9%)	409,765(+27.1%)

분석 결과 하위 소득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2019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분위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적이다. 청년 실업의 증가와 일자리의

질 악화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제약된 상황에서 이전소득의 증가가 하위 소득분위 가구의 소득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하위 소득분위 가구는 차입 제약에 직면한 상태에서 가구소득으로 아동수당 수급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충당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극단적인 경우, ① 소득 증가에 따른 교육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게 나타나고, ② 교육비 지출 외의 다른 소비지출은 필수재 소비로서 고정지출의 성격을 가지며, ③ 이전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구조적인 성장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차입 제약으로 대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는 추가적인 사적순이전소득을 통해 교육비 지출의 증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2000~2012년의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분석한 박문수·최재영·박지혜(2014)에 따르면, 소득분위 1분위의 교육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1.71로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도 나머지 소득분위(소득분위 5분위의 경우 1.5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실제 현실에서도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기 부진으로 인한 저소득층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 청년 가구가 의존할 수 있는 주요 지출 재원은 이전소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청년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으로 인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오히려 사적순 이전소득의 증가를 수반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제 5 장 결론

아동수당 수급이 사적순이전소득액 규모 및 사적이전소득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분석 대상 가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가구의 경우 대개의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사적이전소득의 구축으로 이어져 소득보전 효과가 감쇄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적순이전소득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사적순이전소득액이 45,760원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도 이러한 시사점은 일관되게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적순이전소득액에 대해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 소득분위(균등화 소득 중위값의 70% 이하)에 속한 가구는 아동수당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사적순이전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는 그 크기가 감쇄되나 여전히 (+)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위 소득분위에서는 아동수당 수급액이 사적순이전소득을 구축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 소득분위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수급액 증가에 따른 사적순이전소득액의 증가가 나타난 원인은 교환적 동기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통계청 「2018~2019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속한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2018~2019년간 교육비 및 학생 학원비 지출 항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의 차이는 특히 소득분위 1분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관측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아동수당을 수급함에 따라 하위 소득분위 가구가 양

육비 지출을 늘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적순이전소득액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영유아 아동 양육 가구의 교육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고, 교육비 지출 외의 소비지출은 필수재의 성격을 가져 비탄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구 겪고 있는 근로소득의 성장 부진 문제와 차입 제약의 문제가 더해진다면 저소득층 가구는 늘어나는 교육비 지출을 이전소득을 통해 조달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는 사적순이전소득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한편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에 대한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하위 소득분위뿐만 아니라 상위 소득분위도 아동수당 수급이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소득분위 청년 가구는 아동수당 수급액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적이전소득을 받지 않거나, 반대로 없었던 사적이전소득을 새로 부모에게 요구할 유인이 적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위 소득분위에 속하는 청년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동기(증여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현상이 나타난 집단은 사적순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상위 소득분위,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중위 소득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전이 가장 필요한 하위 소득분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 제도는 본래 정책이 의도했던 아동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에 따라 양육비 지출도 미수급 가구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하위 소득분위 속한 아동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를 늘려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는 대상 가구의 경제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청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에 유용한 정책실험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노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사적이전소득 규모 및 발생 확률 모두를 감소시키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자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분위에서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사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을 구축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수급한 하위 소득분위 가구의 사적순이전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수급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액,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등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피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2020.6.) 기준 국내에서 제공되는 대규모 패널 자료들이 2018년까지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어, 현실적 여건상 패널 자료를 활용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기는 어려웠다. 추후 패널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미시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각 가구의 관측되지 않은 내재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수당 도입 전과 후의 아동수당 수급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의 변화양상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강성호,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재정정책논집, 한국재정정책학회, 13(1), 2011.

강지영,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2(1), 202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2019. 3. 18.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06](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06)

금종예·금현섭,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52(4), 2018.

김지경·송현주,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이전소득 분석」,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4(3), 2008.

박문수·최재영·박지혜,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과 시사점-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4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5344>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정부24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41934>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이란」, 2020. 3. 29. 방문.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노동리뷰, 2006.

유경원·변혜원, 「가계부채의 확대와 대출제약」,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18(1),

2012.

이경배,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학연구, 11(1), 2018.

이지은·정세은,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9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2019.

전승훈·박승준,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경제연구, 30(2), 201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용자통계정보보고서」, 2019. 1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 지출부문)(2018, 2019), 통계청 MDIS, 다운로드. (2020년 5월 받음)

Chetty, R., & Saez, E.,(2010). "Optimal Taxation and Social Insurance with Endogenous Private Insura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2(2)

Cox, D., (2018).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Gerardi, K. & Tsai, Y., (2014). "The effect of social entitlement programmes on private transfers: New evidence of crowding out," *Economica*, 81(324)

Golosov, M. & Tsyvinski, A.,(2007). "Optimal Taxation with Endogeneous Insurance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2)

Jensen, R. T.,(2004). "Do private transfers 'displace the benefits of public transfers? Evidence from South Afric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1)

Juarez, L.,(2009). "Crowding out of private support to the elderly: Evidence from a demogrant in Mexico,"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3)

Jung, H, Pirog, M., & Lee, S. K. (2016), "Do public pensions crowd out private transfers to the elderly? :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15(4)

Robert A. M.,(2016). "Economics of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 The Effect of Child Benefits on Private Income Transfer

Junghwan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ed in 2018, the child benefit system in South Korea supported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7 with the stipend of 100,000 won. While this policy began as a means-tested transfer scheme, it removed its eligibility criteria at the beginning of 2019. Apply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to household survey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net private transfer and the probability of private income transfer as the stipend increased. While child benefits to households with high income crowded out net private transfer from other households,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increased net private transfer as they received the benefits. The crowd-out effect of child benefits on the probability of private transfer has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middle-income household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hild benefit system in South Korea practically reduces the burden of low-income families, in contrast to the popular concern that public transfer may

cause private transfer to crowd out.

keywords : private transfer, child benefit, crowd-out

*Student Number* : 2018-23139